환경사랑 음식점 추천해주세요

광주YWCA 25일까지 접수

광주YWCA가 '제5회 2008년 환경사랑 음식점 선정'을 위해 신청과 추천을 받는다.

광주YWCA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광주시내 음식점 중 ▲소량의 반찬제공 ▲음식물 재활용 ▲남은 음식 싸주기 등 환경사랑에 앞장서는 업소와 환경의식을 가진 업주들의 신청 및 추천을 받는다.

올해로 5년째 진행되고 있는 '환경사랑 음식점'은 연간 15조원에 달하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의 낭비는 물론 심각한 환경문제를 줄이기 위해 실시됐으며, 남은 음식물을 줄이고 환경을 살리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해매다 선정하고 있다. 올해까지 모두 80여 곳의 음식점이 선정된 상태다.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된 음식점은 시민이 선정한 '환경사랑 음식점' 팻말이 부착되며, 광주YWCA 홈페이지에도 홍보된다.

신청이나 추천은 소비자상담실(062-524-3511~3)과 홈페이지(www.kjywca.or.kr)에서 하면 된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국립공원서 취사·야영하지 마세요

내달 24일까지 집중 단속

"국립공원에서 취사, 야영하거나 계곡에서 목욕하지 마세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8월 24일까지 '여름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지리산, 속리산 등 19개 국립공원에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자연자원 훼손 및 지정된 장소 이외 잡상행위, 취사·야영행위, 주차행위와 계곡에서의 목욕, 오물·쓰레기 투기행위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여름철 계곡 주변에 좌대, 평상, 파라솔 등을 설치해 옥외영업을 하는 상업행위에 대해서도 계곡오염의 주범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관할 검찰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환경공단 호남지사 광주 우산동 新청사로 이전

환경관리공단 호남지사(지사장 최수근)가 광산구 우산동 광주무역회관에서 우산동 신(新) 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했다. 공단 신청사는 지난해 12월께 지상 4층 연면적 3천237㎡ 규모의 옛 KTF 건물을 매입해 3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리모델링했다.

공단은 1~2층 사무실과 회의실, 4층은 실험분석실로 이뤄져 있으며 3층은 조만간 지사가 확대될 경우 사무실로 사용될 예정이다.

최수근 지사장은 "13년 만의 청사 이전을 계기로 환경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조직역량을 극대화해 고객중심의 경영체계를 구축, 환경기술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침묵의 死神 '석면'

정부 '제로 선언' 1년, 실효성 없다

기초자료·피해 보상규정 없어 … NGO들 '석면 추방 네트워크' 발족

1급 발암물질로 취급되고 있는 석면(石綿)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7월 '석면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 그 실효성은 여전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현실에 맞는 기초자료나 보상제도 등도 없이 장기계획부터 내놓는 바람에 '공허한 처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석면 종합대책과 피해 실태=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른 공식적인 국내 중피종(석면으로 인한 암) 사망자는 1999년(16명), 2001년(24명), 2003년(33명)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 더 많은 중피종 환자들이 이미 사망했거나 피해를 입고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은 판단이다.

선진국의 경우 영국은 1979부터 2001년까지 석면 관련 사망자가 4만여명, 미국은 '악성 중피종'으로 지난 1975년부터 매년 2천5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앞으로도 7만여명이 추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석면관련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난해 7월 '석면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2011년까지 603억원을 투자해 석면의 원천적 차단, 공공건물, 학교 등 민감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석면사용 실태조사, 주요 석면관련 시설의 피해 및 건강영향 조사 등 석면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2009년부터는 모든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수입·제조·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과거 피해자 치료·보상 제외, 산재 인정 어려워=하지만 정부의 종합대책에 과거 석면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및 보상 부분은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보상 지원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석면으로 인한 질병의 경우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대부분 암으로 이어지는 등 석면 노출과 발생 시간의 간격이 길어 산업재해로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 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인 '비계'를 설치하던 일용직 건설노동자 여수의 이모씨가 석면으로 인한 폐암 산재 인정을 요구했으나 '불인정' 판정이 내려졌다.

이씨는 "비계틀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용접과 보온작업, 석면가루, 용접가루에 노출되었고 배관 이음새를 분리하는 작업에서 가스켓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됐다"고 주장했지만 건설노동자의 작업환경 특성상 이씨의 폐암 원인이 석면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 작업 전 석면 취급에 대한 관리 교육이나 공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건강연대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하루하루 취급하는 일의 종류가 다르며 이직률도 높기 때문에 석면 노출로 인한 질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석면 추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발족=이같은 상황에서 지하철 석면공해와 재개발지역의 석면노출, 석면방직공장의 노동자들과 지역주민 건강피해 등 그동안 사회문제화되어 온 석면공해를 추방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본격화된다.

지난 3일 서울대에서 환경연합과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등 25개 환경, 노동단체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Ban Asbestos Network Korea) 연대기구를 발족했다. BANK는 석면공해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석면피해조사 및 피해자구제, 정부정책모니터링 및 국제연대활동 등을 전개해 다른 나라의 석면운동가들과 함께 피해자를 구제하는 국제연대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환경부와 노동부와 환경보건원년 및 석면관리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석면공해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 석면 피해자를 구제하는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

석면, 왜 위험한가?

짧은 섬유질 폐에 박혀 폐암 유발

일명 돌솜으로 불리는 석면(石綿·asbestos)은 섬유모양을 한 각섬석의 한 종류로 주로 사문석군 광물의 변종인 온석면(溫石綿)으로 구성된 사문암을 채광 또는 채석할 때 얻어지는 광물 섬유를 가리킨다. 열에 강하고 견고해 학교나 병원 등 공공시설의 건축자재나 농촌가옥의 슬레이트에 많이 사용되었고,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등 약 3천여 종류 이상의 제품에 들어갈 정도로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석면은 치명적인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석면섬유가 인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는 1970년대 이후 발표돼 석면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종이, 두꺼운 판지 및 석면-시멘트 건축재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짧은 섬유는 석면침착증(石綿沈着症), 폐질환 및 급속히 진행되는 치명적인 폐암인 중피종(中皮腫)을 발병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석면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게 되면 석면폐나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질환이 발병하게 되는데, 석면질환은 현대의학 수준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불치의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0년에서 40년의 긴 잠복기간을 거친 후 어느 날 갑자기 자각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망하기 때문에 자신의 질병이 석면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석면 질환을 '소리없는 죽음'이라고도 한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환경성질환 연구 체계화 한다

화순전남대병원 등 5곳 연구센터 지정

소아암 관련 환경 위험 요인 지표 개발

화순전남대병원 등 전국 5개 대학병원이 환경부 지정 환경성질환 연구센터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최근 주요 소아암·알레르기 질환 등 환경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해 연구센터 5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화순전남대병원(소아암) ▲인하대 부속병원(알레르기질환)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아토피피부염·알레르기비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석면관련 질환) ▲서울대 의대(선천성기형) 등이다.

이로써 현재 운영 중인 환경성질환 연구센터인 서울삼성병원(아토피피부염), 고려대 안암병원(천식), 단국대 의료원(소아 발달장애)를 포함 모두 8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연구센터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응모한 10개 종합병원과 의과대학 중에서 연구 수행능력,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와 현장확인을 거쳐 선정됐다.

이에 따라 화순전남대병원은 8월부터 소아암과 관련한 환경위험 요인과 예방 요인 규명 및 평가지표 개발, 발암물질의 사립체 유전자에 대한 기능이상 및 유전변이 분석 등과 관련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 이들 센터들은 협력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환경성질환과 환경요인간의 상관관계 조사·연구, 환경측면에서의 예방가이드 라인 마련, 환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오는 2011년까지 관련 연구센터를 총 11개소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올 하반기에는 각 연구센터별로 구축 중인 홈페이지를 연결해 시민들에게 환경성질환에 대한 유용한 정보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강필상기자 kps@